eISSN 3140-409X

ISSUE BRIEF

이슈브리프 913호
(2026.11.10)

선전 APEC, 무엇을 볼 것인가: 5대 관전 포인트와 한국의 대응

제913호

박병광 bkpark@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다자외교의 장인 동시에 미·중·러 등 주요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중요한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3자 정상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회의는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회동의 성사 여부와 구체적인 의제 및 합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다섯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주시해야 한다. 첫째, 미·중·러 정상 간 전략적 협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이다. 둘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북핵 문제의 논의 여부, 그리고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다. 셋째, 미·중 무역 갈등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이다. 넷째, AI·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과 국제 기술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문제다. 다섯째, 중국이 APEC을 통해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질서 구상의 실질적인 성과와 역내 경제통합의 향방이다.

특히 강대국 간 협의가 국제적 긴장 완화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전략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보정책의 기반으로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상 간 만남의 상징성보다 합의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를 중시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아세안·유럽 등과의 다자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및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망을 다변화해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선전 APEC을 강대국 간 역학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고 국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키워드: 선전APEC, 미중러 정상회담, 관전포인트, 북미대화, 미중 무역갈등

선전 APEC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6년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다자외교의 장인 동시에, 주요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는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회의는 단순한 경제협력 논의를 넘어 국제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3자 회동은 관련국 간 협의 단계이며, 성사 여부와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APEC의 주제를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으로 설정하고 개방·혁신·협력을 주요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자유무역과 역내 경제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공급망 회복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역내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국의 외교적 위상과 기술혁신 역량을 부각하려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회의를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 여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중 경쟁의 변화, 북러 군사협력, 핵심기술과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핵심은 강대국 간 협의가 한국의 국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새로운 전략적 부담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미·중·러 정상외교와 강대국 간 전략적 거래

가장 먼저 주목할 사안은 미·중·러 3자 정상회동의 성사 여부와 실제 논의 내용이다. 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새로운 강대국 공동전선이나 국제질서의 분할로 곧바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세 나라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관리하고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간 충돌을 통제하면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협상 공간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문제와 핵 군비 통제 등에서는 세 나라의 입장 차이가 커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회동 자체보다 정상 간 합의의 내용과 후속 조치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중 간 전략적 안정에 관한 합의가 지속되는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는지, 강대국 간 협의가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대국 간 긴장 완화는 국제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동맹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한국에는 새로운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북한 변수와 북미 대화 가능성, 한국의 외교적 대응

한국에게 선전 APEC의 가장 직접적인 관심사는 북한 변수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9일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고, 여권 안에서도 11월 APEC 계기의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이 비회원국 정상 자격으로 선전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북한이 시기와 조건을 저울질하며 실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본다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최근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협상력을 높이려는 모습이다. 김정은은 10월 24일 단둥에서 왕후닝 정협 주석을 만났고, 김여정은 11월 4일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면서도 대화가 선택지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면서 북한의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김정은이 오지 않더라도 북한 문제는 선전에서 논의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중·러 3자 회동의 의제로 거론되는 것은 핵군축, 우크라이나 종전, 대만, 공급망 등이며 한반도 문제가 명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중재할 의향이 있다는 외신 보도와 북중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을 고려하면, 북한 문제가 양자 회담이나 3자 대화에서 언급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때 가장 경계할 것은 한국이 관찰자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 영향력을 과시할 수도 있고, 북러 군사협력이 정찰위성·미사일 등 핵심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응을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말고,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주시해야 한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 미·중 무역 갈등과 핵심광물 공급망

미·중 경제관계의 향방은 한국의 산업과 통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국이 관세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 주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거나 상호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의 생산과 투자, 수출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희토류와 핵심광물은 중국이 보유한 공급망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다. 미국은 중국에 기존 무역합의에 따른 핵심광물 공급과 농산물 구매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양국의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수출 허가와 공급 물량이 안정되는지, 미국의 대중국 기술통제가 어떤 범위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 미·중 합의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 재활용 기술 개발, 대체 소재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별 공급망 노출도를 점검하고, 미·중의 정책 변화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안정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 AI·반도체 경쟁과 기술규범의 형성

AI와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은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축이자 한국의 장기적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APEC에서는 AI 활용과 디지털 경제, 기술혁신, 역내 경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은 기술개발의 속도뿐 아니라 기술표준과 규범을 둘러싼 논의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제한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AI와 첨단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이러한 경쟁은 기술의 국제적 이동, 데이터 활용, 기업의 시장 접근, 연구개발 협력의 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안보상 민감한 기술과 일반 상용기술을 구분하고, 기술보호와 국제협력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의 기술·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안전, 첨단 반도체 기술규격과 공급망 기준, 데이터 거버넌스 등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산업적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

다섯 번째 관전 포인트: 중국의 지역질서 구상과 APEC의 실질적 성과

중국은 APEC을 통해 개방과 경제통합, 기술혁신, 공급망 협력을

강조하면서 역내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디지털 경제, 연결성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향후 지역 경제질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협력 구상을 선언적 수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는지, 무역과 투자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역내 공급망의 안정성이 강화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개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지속된다면 선언과 실제 정책 사이의 간극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자체를 일률적으로 경계하기보다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협력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비차별 원칙, 공급망의 투명성, 경제적 강압의 방지 등을 강조하면서 역내 경제규범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APEC의 성과는 중국의 외교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아니라 회원국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협력 환경이 조성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의 대응 방향: 동맹 기반, 전략적 소통, 다자협력

선전 APEC의 의미는 강대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 자체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대화가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 한국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이다. 미·중·러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긴장 완화와 경제적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한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전략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은 다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동맹을 안보정책의 토대로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동맹의 신뢰성을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경제·안보 현안의 충돌을 관리해야 한다. 외교적 유연성은 안보 원칙의 모호함이 아니라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둘째, 정상외교의 상징보다 합의의 실효성을 중시해야 한다. 정상 간 만남과 공동선언은 출발점일 뿐이다. 한국은 회의 전 주요 현안별 목표와 협상 메시지를 준비하고, 회의 기간에는 정상 및 외교장관 간 소통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전달해야 한다. 회의 이후에는 합의 이행과 후속 협의를 점검해 선언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양자외교와 다자협력을 병행해 외교적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 한미·한중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본과의 협력, 아세안 및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협력망은 특정 강대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미·중 경쟁이 격화될 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넓혀준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안보, 해양안보 등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정상회의 이전에 미·중·러 관계와 한반도 안보에 관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회의 기간에는 주요국의 발언과 합의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며, 회의 이후에는 외교·안보 및 경제 부처가 공동으로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3자 정상 회동이 성사되는 경우뿐 아니라 무산되는 경우까지 대비해 정책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